

동북아역사 리포트



Vol. 34

NORTHEAST ASIAN HISTORY REPORT

2023년 2월 15일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 사라진 ‘강제(forced)’

이정환_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1. 머리말
2.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 일본의 의도적 ‘강제(forced)’ 방기
3.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이례적 유감 표현과 변하지 않는 일본
4. ‘강제(forced)’ 표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성
5. 결론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 사라진 ‘강제(forced)’

이정환_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1. 머리말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전체 역사(full history)’ 개념에 입각한 한일 양국 간의 외교적 타협을 토대로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하지만 그 이후 일본은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에 대한 해석전략에서 당초 약속했던 한국인 등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해석을 내놓지 않았다. 이로 인한 한일 간 갈등이 몇 해 동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어 왔다. 최근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사도광산 또한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과 마찬가지로 한국인 강제동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한일 갈등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을 둘러싼 한일 갈등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금 지급 확정판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갈등의 성격이 다르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은 대법원 판결의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있다. 반면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을 둘러싼 한일 갈등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가 한 약속과 그 이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일본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는 당초 약속했던 ‘강제(forced)’라는 표현을 지우기 위한 매우 적극적인 의도가 발견된다. 이를 통해 2015년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시 한일 양국 간 외교적 타협의 토대였던 ‘전체 역사’ 개념을 형해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한일 역사인식 현안에서 ‘강제’라는 표현 자체를 묵음 처리하려는 의도까지 엿보인다.

※ 이 글은 저자의 「일본 역사수정주의의 세계보편성 획득 시도와 한일관계 -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와 ‘전체 역사(full history)’」(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2022, 『세계정치 37: 글로벌 구조변동과 한일관계』, 사회평론아카데미)의 일부를 동북아역사 리포트 형식에 맞추어 수정 편집한 것임을 밝힌다.

2.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 일본의 의도적 ‘강제(forced)’ 방기

2015년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결정 시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8개의 권고사항을 내놓았다. 그중 7번째 항목 g)는 일본 정부가 유산에 대한 해석전략을 마련할 때, 각 유적지가 지니는 ‘**현저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의 공헌을 강조하고, 각 유적지의 ‘**전체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라는 것이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이 권고에 주석을 달아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전략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 대표의 성명에 주의한다고 적시했다.

2015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주(駐)유네스코 일본 대사 사토 구니(佐藤地)는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동한(forced to work)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일본은 정보센터 설립 등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전략에 포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했다. 한국 정부는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한일 간 갈등의 주요 소재였던 하시마(端島)섬(일명 군함도) 등에서의 한국인 등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전향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본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2년 후인 2017년 11월 30일에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보존상황보고서(이하 <보존상황보고서 2017>)를 제출했다. <보존상황보고서 2017>에는 ‘전체 역사’에 입각한 해석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계획이 담겨 있다. 당시 한국 내에서는 <보존상황보고서 2017>의 해석전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강제(forced)**’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일본 산업을 지탱한(supported Japanese industries)**’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존상황보고서 2017>에 담긴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에 대한 해석전략은 준비 단계에 가까워서 한일 정부 간 갈등이 강하게 표출되지는 않았다.

2018년 바레인 마나마에서 개최된 제42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보존상황보고서 2017>을 검토하고,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에 대한 11개의 권고사항을 결정했다. 이 중에서 해석전략과 관련된 항목은 2, 7, 8, 9, 10, 11이다. 권고사항 7, 8, 9는 해석전략의 구체화 요구에 가깝고, 권고사항 2, 10, 11은 2015년 일본 정부 대표의 발언과 관련이 있다. 권고사항 2와 11에서 2015년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 결정([39 COM 8B.14])을 다시 언급하며 이를 완전히(fully)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이 항목에 주석으로 다시 한번 2015년 일본 정부 대표 발언을 환기하였다. 또한 권고사항 10에서 관계 당사자와의 지속적 대화를 명시한 점은 일본의 추후 해석전략 구체화 과정에서 한국인 등 강제동원 문제를 제기한 한국 정부와의 대화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18년 제42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에는 일본 정부가 2019년 12월 1일까지 새로운 보존상황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9년 11월 29일 새로운 보존상황보고서(이하 <보존상황보고서 2019>)를 제출하였다. <보존상황보고서 2019>는 제42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해석전략 관련 권고사항 중 한국인 등 강제동원 문제가 포함된 ‘전체 역사’ 이해 필요성에 대한 맥락상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볼 수 있다. <보존상황보고서 2019>는 권고사항 7, 8, 9에 대해 각각 답변을 내놓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해석 감사를 실시하고 각 유적지에 대한 해석연구 및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설립할 예정으로 권고를 이행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관계 당사자와의 대화를 명시한 권고사항 10에 대해서는, 가동자산을 포함한 산업유산에 관한 유식자회의,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보존위원회, 지구별 보존협의회, 세계유산루트추진협의회, 각 지구의 주민설명회 등 일본 국내의 관련 단체 및 개인들과 협의하여 권고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존상황보고서 2019>에는 2015년 등재 결정 시의 맥락에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중요한 관계 당사자인 한국 등 주변국과의 대화가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일본은 <보존상황보고서 2019>를 제출하고 4달 후인 2020년 3월 31일에 도쿄에서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일단 공식 개관하였고, 6월 15일에 일반 공개를 시작했다.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에는 <보존상황보고서 2019>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던 한국인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가 아예 왜곡되어 있다.** ‘군함도(하시마섬)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강제노동을 당했다는 증언’이 허위라는 군함도 주민의 증언도 전시되고 있다.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방문한 한국 특파원들에 의해 산업유산정보센터가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역사왜곡의 전시를 하고 있다는 비판적 보도가 무수히 쏟아져 나왔다. 한국 정부는 산업유산정보센터가



군함도(하시마섬) ©동북아역사재단

2015년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결정 시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와 국제사회에 했던 약속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

2020년 11월 30일에는 <해석전략 실행상황보고서>가 발간되었다. 2018년 제42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의 권고사항 8에는 산업유산정보센터가 개관하면 일본 정부는 유산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에 관한 업데이트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다. 이에 일본 정부가 답을 내놓은 것이다. <해석전략 실행상황보고서>에는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전략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정용 관련 문서를 전시하고 있음이 보고서에 꽤 많이 기술되어 있지만, **한국인 강제동원 노동자를 비롯한 일본 외 지역 출신 노동자들이 일본 노동자들과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취지가 해석전략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보존상황보고서 2017>, <보존상황보고서 2019>,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 내용, <해석전략 실행상황보고서>는 2015년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당시의 일본 정부 대표 발언의 표현과 취지에서 갈수록 멀어져 가는 일본 정부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에 대한 해석전략을 보여 준다.

3.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이례적 유감 표현과 변하지 않는 일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년 연기되어 2021년 7월에 개최된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존상황보고서 2019>, <해석전략 실행상황보고서> 등에 대한 결정문을 내놓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이 결정문에서 일본이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개소하고 일부 요청사항에 잘 대응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도 적시해 놓았지



독일 본에서 열린 제 39차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위원회

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이 충분하지 않았음에 강한 유감을 표하였다(5항). 그리고 이에 대해 다음의 권고사항을 다시 요구했다(6항). **a)** 각 지역이 어떻게 ‘현저한 보편적 가치(OUV)’에 기여하는지를 보여 주고, 각 지역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석전략 마련, **b)** 다수의 한국인과 그 밖의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혹독한 환경에서 노역하도록 강요받았다는 것과 일본 정부의 동원 정책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c) 정보센터 설립과 같이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전략에 포함, d) OUV가 적용되는 기간과 그 외 기간을 포함해 전체 역사에 대한 해석전략과 디지털 해석 자료에 있어서의 국제모범사례, e) 관련 당사자들과의 대화 지속이 그것이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의 기간 동안 일본이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유네스코의 공식적 판단이 나온 셈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자세는 변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에 대한 결정문 7항에 의거해서 일본 정부에 요구된 새로운 보존상황보고서(이하 <보존상황보고서 2022>)를 제출하였다. <보존상황보고서 2022>는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요구가 한반도 출신 노동자의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자신들의 올바른 이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측에 다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사실 유네스코 외교만을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때 <보존상황보고서 2022>는 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 **일본 지역사회에서도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성찰적 목소리가 존재해 왔으며, 이에 대한 추모 기념사업과 공간이 존재한다.** 하시마섬에 소재한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岡まさはる記念長崎平和資料館)’ 같은 곳을 소개하면서 이런 인식도 존재한다고 상대화된 관점만 제공해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현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는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기록유산 제도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 측의 해석 시도가 다양한 시각의 하나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유네스코는 유산의 해석을 둘러싼 갈등 상황에서 진정성에 대한 권위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 유네스코는 상호 존중과 대화만으로도 그 의미를 찾는 경향이 크다. 즉, 일본 측이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 ‘강제로 노동한 한국인 등’의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도 존재한다고 나열한다면, 유네스코 공간에서 (한국의 반발과는 상관 없이) 더는 문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면에서, 일본이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의 해석전략에서 보여 준 ‘강제로 노동한 한국인 등’이라는 표현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그 열성적 노력은 외교 전략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는 일본 내의 역사수정주의적 인식이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을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의 실질적 산파인 가토 고코(加藤康子)가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대상은 한국만이 아니다. 한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세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외무성이 가열한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한다.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은 가토로 대변되는 아베 정권기 총리 주변 역사수정주의 세력의 안마당에 가깝다. 외무성의 국제적 약속이 국내적 정치 고려 속에서 비틀어져 버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강제(forced)’ 표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성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일 양국 간 타협이 도출된 7월 5일 직전이긴 하지만, 7월 2일부터 산업유산 등록 관련 업무 분야의 내각관방 참여로 활동하기 시작한 가토는 2015년 일본 정부 대표의 ‘강제로 노동한(forced to work)’이라는 표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다. 더불어 당시 사토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의 발언 때 옆자리에 배석하고 있었던 이즈미 히로토(和泉洋人) 지방 창생 담당 총리 보좌관은 스가 정권에서도 총리보좌관직을 유지했었다. 무엇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현 총리는 당시에 외무대신이였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주장하던 ‘강제 노동(forced labor)’이라는 표현을 반대하고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찌 됐건 ‘강제(forced)’ 표현은 받아들이는 정책 결정이 있었으며, 2015년 이후 지금까지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에 대한 해석전략을 책임지고 있던 인사들은 2015년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도 중심적으로 개입되어 있었다. 그들이 ‘강제’라는 표현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하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은 2015년 7월 시점에 일본 정부가 ‘강제’ 표현을 전략적으로 수용했던 과정에 관여되어 있었다.

일본이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에 대한 해석전략에서 ‘강제’라는 표현을 지우고, 일본 노동자와 구분 없는 ‘징용’과 ‘산업노동’이라는 표현을 택하게 된 배경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의 굴곡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 속에 격화되어 온 한일 역사 갈등이 존재한다. 한국 정부는 ‘강제’라는 표현을 배제한 일본의 해석전략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2015년 권고와 2018년 권고의 약속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고,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가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사례에서 ‘전체 역사’의 이해 증진을 위한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강제동원 피해자를 둘러싼 한일 갈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강경론 속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후속 조치의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등재 취소될 위험성이 크지 않은 가운데,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대법원 판단에 대한 일관된 역사정책에 맞추어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후속 조치를 시행했던 것이다.

하지만 2021년 이후 유네스코 외교 무대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다소 난처해진 상황이다. ‘강제’라는 표현을 지우는 상징정치가 유네스코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문제시되었다는 점은 한일 역사 현안에 대한 일본의 의도가 국제적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최근 한국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의 정책 방향성 속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 후속 조치에 대한 대안 모색에 적극적이다. 정책 관여자들이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 후속 조치의 대안 모색에 몰두해 있는 가운데, ‘강제’라는 표현을 지운 일본 측의 의도적 행위를 지적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가 적

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대법원 판결의 후속 조치에 대한 대안 마련은 필요한 일이다. 다만, 일본이 이를 계기로 지워 버린 ‘강제’라는 용어를 되돌리는 일도 꼭 필요하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를 위한 긍정적 여건을 제공해 주었다.

2023년 9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45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은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 직면한 당장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실이 매우 커 보인다. 한일관계 개선과 분리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5. 결론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와 그 이후의 후속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이미 10여 년간 지속되었다. 하지만 그 갈등의 기본적 구도는 변하지 않았고, 최근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한일 갈등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다. 일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책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점은 역사에 대한 반성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에 대한 기억을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 한일 양측이 산업화와 제국주의, 산업화와 인권의 문제를 보다 보편적 차원에서 성찰적 자세로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사 바로 세우기 노력(노예노동에 대한 재성찰 등)은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사례가 한일 양국만의 특수한 갈등 사례가 아니고, 인권과 제국주의에 대한 성찰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인류 보편적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둘러싼 갈등 사례는 한일 양국의 근대적 경험에 대한 보편적 성찰 모색이 앞으로 큰 과제이며 동시에 여전히 지난한 과제임을 보여 주고 있다.

지난 2023년 1월 24~25일 유네스코 세계위원회는 특별 세션을 개최했다. 우크라이나 오데사의 세계유산 선정이 큰 화제가 되었으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2021년부터 논의해 온 ‘근현대기억갈등유산(저자 번역, 영어 명칭: sites of memory associated with recent conflicts)’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 사항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향후 회원국 사이에 해석 갈등이 있는 세계유산 등재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확립하려는 성격을 지닌다. 이는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해석 갈등이 양국만의 특수하고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만약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이 한일 상호 인식 공유 속에 잘 이루어졌다면, 유네스코 세계유산레짐 속 새로운 제도 구축은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을 본보기로 만들어졌을지도 모

른다. 반대로, ‘근현대기억갈등유산’ 관련 거버넌스 구축 논의에서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은 실패 사례로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사도광산의 상징인 '도유노와레토(道遊の割戸)'와 광석 운반용 화차 ©동북아역사재단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이정환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전공은 일본의 정치외교이다. 최근 연구로는 「아베 정권 역사정책의 변용: 아베담화와 국제주의」(『아시아리뷰』, 2019), 「일본 경제안보정책 정책대립축의 이중구조」(『일본연구논총』, 2022) 등이 있다.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격'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 제27호**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본다
- 제28호**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 제29호**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 제30호**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
- 제31호** 우리 역사 속의 러시아를 생각하며
- 제32호** 중국의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문화 주장
- 제33호** 독일-프랑스 역사 화해의 회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